

##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쉼 권리 보장하라”

5일, 근기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휴일은 당연히 무급

문재인 정부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9월 30일을 시작으로 10월 3일 개천절, 10월 3~5일 추석 연휴, 10월 6일 대체휴무, 10월 9일 한글날까지 열흘 동안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수 노동자는 공휴일에 평일처럼 노동하거나,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9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쉼 권리를 요구하고,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입법을 촉구했다.

이규철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사무장은 “공휴일 전에 노동상담이 많다. 광복절에 쉬라고 하면서 월급을 공제한다는 상담을 받을 때면 곤혹스럽다”라며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만연한 공휴일 근무 관행을 지적했다.

사장이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라 민간기업 노동자들이 쉼 이



유가 없다’라며 법대로 하라는 경우 노동자들은 공휴일에 일해도 휴일, 특근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일하지 않고 쉬면 무급 처리한다.

이규철 사무장은 “황금연휴에 노동자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현철 민주노총 경기본부 안산지부 부지부장은 반월·시화공단의 빨간 날’ 실태를 고발했다.

정현철 부지부장은 “4, 5년 전부터 ‘빨간 날’에 쉬지 못한다는 상담전화는 늘고 있다”라며 “사용자들은 취업규칙을 편법으로 변경해 휴일로 지정한 ‘빨간 날’을 없앴다. 선거일조차 쉴지 말지는 사장 마음”이라고 규탄했다.

김기돈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

장은 “빨간 날’ 문제는 공휴일 제도를 노동자 전체에게 적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며 법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기돈 실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62조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악용한 강제

사용 등으로 연차휴가제도가 무력화된다”라며 “휴일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55조를 빨리 개정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속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고용과 복지를 논하기 전에 노동자가 임금과 고용에 대한 걱정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래야 저 같은 의사도 답이 없는 상담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준)’와 함께 전국 산업단지에서 법제화 촉구 1만인 서명, 선전전, 실태조사, 국회 토론회 등을 벌일 계획이다.

# “ILO 핵심협약 기준은 모든 회원국 의무”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민주노총 간담회...전교조·전공노 합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촉구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해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전교조와 전공노 등 범외노조 합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국제 기준에 맞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전교조·전공노 범외노조 합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상관없이 당장 해결할 수 있다. ILO는 한국 정부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9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20년 동안 ILO는 한국 노동기본권의 열악한 현실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하는

지 제시하며, 투쟁하는 노동자의 숨통을 틔워줬다” 라고 환영 인사를 건넸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ILO 핵심협약은 좌우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인권이자 기본권이다. ILO 회원국이라면 모두 비준할 의무가 있다” 라고 화답했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87호, 98호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ILO는 6월 17일 한국 정부에 전교조 범외노조화·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인정등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는 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 시그네틱스분회, 16년 사이 세 번째 정리해고 무효 판결

서울남부지법, “해고 회피 노력 없어 부당해고” ...분회, 광화문 농성 벌이며 투쟁 중

16년 사이 세 번이나 정리해고를 당한 금속노조 경기지부 경기금속지역지회 시그네틱스분회(분회장 윤민레, 아래 분회) 조합원들이 세 번째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9월 1일 분회 조합원 아홉 명이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사업 폐지를 위한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 라는 회사 주장에 대해 “광명사업부 폐지는 사업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 전부를 폐지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 라며 이번

해고가 정리해고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회사가 해고 회피 방안에 대해 분회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점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비용 절감이 왜 불가능한지 이해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 ▲정리해고를 전제로 보상에 관해서만 협의하려 한 점 등을 들어 이번 해고가 해고 회피 노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윤민레 분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두 번째 정리해고를 당했을 때와 상황이 똑같아서 이길 수밖에 없었다. 당연한 판결” 이라며 “시그

네틱스가 세 번이나 정리해고했는데도 법원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해고가 아니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부분은 아쉽다” 라고 밝혔다.

시그네틱스는 2001년과 2011년 두 차례 조합원을 정리해고했다. 시그네틱스는 2016년 9월 30일 광명사업부 폐업을 앞두고 세 번째 정리해고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열세 명이 희망퇴직하고, 아홉 명이 정리해고 당했다. 분회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농성을 벌이며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다.